

# 이윤도 안 남는 공공SW 사업... 중견기업 “울며 겨자 먹기”

>> 1면 ‘정부24 먹통...’서 계속

IT예산, 선진국 수준 3% 올려야 정부, 해결책 ‘대기업 참여 완화’ 중견기업들 “이윤 내기 힘들다” “성장위해 오래된 악습 폐기해야”

A씨는 “2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원래도 네이버와 KT 등 대기업이 참여했던 거대 산업 분야”라며 “올해 공급기업 참여조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라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과 필수 요건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개발 지원 분야 또한 공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별도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납품대가는 과거와 같다. 다른 말로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24 먹통 사태는 현 공공SW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모두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정당 대가 미지급 ▲컨트롤 타워 부재 및 소통창구 전무 ▲담당자의 업무연속성 보장 불가 등이다. 특히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로 인해 전문성 없는 인력의 투입, 능력있는 기업의 위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SW 업계 17개 단체는 총선 직전인 지난달 6대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정책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및 거래구조 개선’을 들며 공공SW 사업 정책 문제를 시급하게 꼽았다. 중견기업마저도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공공SW 사업은 기능별로 금액을 산정해 사업 수행 기업에 지불하는 기능점수(FP) 방식을 채택 중이지만 약 15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단 두차례 단가를 인상했다. 이 탓에 물가인상률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못 지킨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사업 진행 중 과업 범위를 크게 늘리며 대가 없는 추가작업도 비일비재하다.

중견SW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900억 원을 들여 공공SW 사업 방식으로 구축한 위택스는 2월 지방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먹통이 되면서 법무·세무사무실을 곤경에 빠뜨렸지만 복구 후에도 계속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닷새간 전국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된 ‘정부24 먹통 사태’는 현 공공SW 사업이 가진 문제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와 여러 업체가 참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소통 창구, 업무 연속성이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공무원 담당자의 현실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통한 해결을 선언했다. /뉴시스

W 사업을 이끈 중견 SI(시스템 통합)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은 참담한 상황이다. 협의회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별도기준을 단순 합산했을 때 1.6%에 불과하다. B2B를 주력으로 하는 IT 대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은 두 자릿수가 흔하다. 포스코DX와 롯데이노베이트는 각각 71%, 66.3% 성장했고,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5% 이상이다. 가장 높은 LG CNS는 8.3%다. 반면 중견 SI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수치는 5% 이상은 없고, 3% 이하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는 중견 SI 기업들이 B2B 사업 대신 B2G 사업을 주로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최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윤을 내기 힘든 현 공공SW 사업환경은 중견기업들에 울며 겨자 먹기 고 대기업들에게도 별 매력이 없다”며 “국

가 전체 예산에서 IT예산의 비중이 1%가 안 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은 사실상 공공SW 사업의 일부를 제외한 전 영역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먹통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차분명하다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인 만큼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과 현실은 또 어긋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 운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한 50개 사업(기각 제외) 중 참여가 인정된 경우는 34건이며 인정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에 달했다.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예외를 규정한 2012년(인정 비율 25.0%)과 대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클라우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탓이다.

지난해 공공SW 사업 환경 개선 및 정당대가 실현을 골자로 하는 SW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이라는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낮은 관행”이라며 “SW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T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정부 구축이라는 장밋빛 슬로건 아래에는 가시밭도 아니라 쓰레기통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정부24 먹통 사태 후 3개월만에 유사 사례로 재연됐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임을 알고 정부와 양당이 조속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부문 AI 활성화’ 등 박차

제5차 전체회의... 6개 정책과제 발표 디지털 정부 전환 가속 등 위해 제시

지난해 4월 첫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청사진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정책과제를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해 74%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 예산은 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5배 늘린 10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보완했다.

18일 디플정위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디플정위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종이없는 행정구현을 위한 원본 요구 법령 일괄정비 ▲농업 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신속 구현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 6개 과제를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사이 민원 상담에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도우미(AI)를 도입하고 15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거 후 온라인화 하며 꾸준히 디지털 정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개 과제는 디지털 정부 전환 가속과 성과체감을 위해 제시됐다.

지난해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74%(367억원)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 예산은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보강했다. 올해 예산은 104억원으로 지난해 20억 원 대비 5배 많은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플랫폼 이용 지원 사(27억 원) ▲서비스 개

발 지원 사업(77억 원)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예산을 활용할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 또한 12일 공모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